

일본사회의 '미투(#MeToo)'와 민주주의 : 구조화된 폭력에 눈감은 언론의 '젠더평등' 담론

이 미 숙 링크대학교 글로벌리버럴아츠프로그램운영센터 조교수

일본에서의 '미투(#MeToo)'운동은 2017년 기자회견과 저서를 통한 이토 시오리의 용기있는 성폭력 고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유명 블로거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투가 이어지며, 소셜미디어에서의 미투관련 게시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대중적인 수준에서의 미투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2018년에는 여성 기자들의 연대조직이 결성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여성들에게 힘이 있는 구두를 신을 것을 강요하는 직장 내 복장 규정이나 문화를 규탄하는 #KuToo 운동, 그리고 참가자 개개인이 한 송이 꽃을 들고서 성범죄 피해 경험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공유하는 '플라워데모'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의 주류 언론 및 정치 시스템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파동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이는 '미투'를 젠더화된 권력관계, 즉, 여성을 둘러싼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기인한 문제라기보다 여전히 '사실'을 다루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바라보는 주류 언론과 사회의 시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의 주요언론은 '미투'에 냉담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저널리즘의 '객관보도' 원칙은 정부,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의해 권위가 씌워진 '사실'은 보도될 수 있으나 개인의 '주장'은 권위에 의한 판단 없이는 기사화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토 시오리로 검색되는 기사가 늘어나거나 또는 젠더 평등 및 성폭력을 키워드로 하는 기사가 늘어나도 성폭력을 둘러싼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거나 이를 피해자의 시점에서 해설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미투를 개인 간의 '사실' 관계를 다루는 문제로 '개인화(individualization)'하게 되며, 주요 기사로 다루기보다 짧은 사건 기사로 다루게 된다. 이는 2019년 군마현 쿠사츠초의회의원 중 유일한 여성의원이었다던 아라이 쇼코가 초장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자 바로 징계적 제명을 당하고 이후 복직되자 다시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해직당한 사건이나, 2021년 방송인 마리에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폭력 고발이 주요 언론에서 거의 다루이지 않은 배경을 말해준다. 미투 언론 담론이 구조화된 젠더권력에 눈감은 채 '개인화'되는 한편, 젠더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질적인 젠더평등과 이를 위한 담론 형성을 위해, 정치 및 언론에서의 구조적인 젠더격차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